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운영 현황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 정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사회조사 결과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11.29일
국회 제출, 시행령(11.20일)·시행규칙(11.29일)도 개정·공포

- (개정방향)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5.27)’의 후속조치로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5.27, 관계부처합동)〉

[목적] 전통적 유통경로(53%)인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구분	현행	개선
거래	경매 위주	경매·정가수의매매 선택
주체	규제를 통한 관리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시설	노후화	저온저장 등 현대화
물류	소규모 출하·수작업	파렛트 출하·하역기계화

○ [기대효과]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

□ 개정안 주요내용

1) (도매시장법인) 규제완화를 통한 역할 확대

○ [도매시장 법인의 매수집하 제한적 허용]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직접
원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까지 허용

※ 개정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에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정가·수의
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할 수 있다’고 명시

- 위탁판매 의존 시 출하자와 구매자간 원활한 예약거래에 애로가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산지 출하자 및 중도매인이 원하는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매수 허용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범위 확대]** 배송 업무 추가

※ 개정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경영)의 경영 항목에 배송 사업 추가

- 산지의 소량다품목 물량 출하 유치 용이, 최종 수요자에 대한 상품 배달 및 판매서비스 기능 제고하는 등 도매시장의 물량 집하분산기능을 강화하여 물류효율 제고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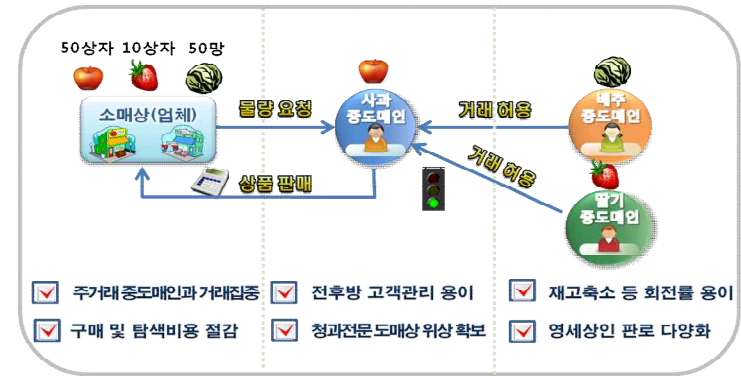
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 명확화

※ 개정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의 경영사업의 제한)에 경영사업 제한할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확대>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정가수의매매의 개념 및 기대효과>

[정가매매] 백화점 등에서 가격을 미리 붙여놔 반드시 그 가격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가격 정찰제를 의미

[수의매매] 판매자와 구매자가 1:1로 상대하여 흥정한 후 가격 결정하는 매매 방법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 주체별 기대효과]

산지(출하자)	도매시장	소매점 등
• 산지·도매시장간 협력 관계 구축 • 대규모 산지유통조직의 안정적 판로처 제공 • 산지 출하 농산물의 규격화·규모화 가능 • 사전에 출하물량이 확정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안정적 거래 가능 • 맞춤형 소포장 상품 출하 확대 등 부가가치 향상 • 예약거래를 통해 우수출하품 판로 확대	• 가격 불안정성 해소 • 잠재수요 창출로 시장활성화에 기여 • 형식적 경매 등 불공정거래 방지 • 경매 대기시간에 따른 기회 비용 최소화 • 도매시장 법인의 보관·저장·가공업 등과 병행 시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 전자거래 통한 정가수의 매매 시 물류효율화 기여	• 소비자 요구에 맞춰 정사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 받는 시스템 구축 • 대형 구매자의 안정적 가격 조달 자원 • 시장에 가지 않고도 필요 물량 조달 가능

2) (중도매인)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강화 및 거래질서 확립

○ **중도매업 명의대여 금지규정 명확화**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경제적 약자 보호

※ 법률개정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서 중도매인의 금지 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명시

○ 중도매인 간 거래금지 → **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적 허용**

-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을 중도매인이 갖추으로써 소매점(중소슈퍼, 전통시장 등) 등의 one-stop 쇼핑 지원

※ 법률개정안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중도매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

주요 농정 이슈_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운영 현황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기본법 시행 1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정보 통합서비스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협동조합 운영 현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12.1) 후 지난 1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운영 중

- 11월 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 이 중에서 3,057건 신고수리 또는 인가

※ 협동조합의 월평균 설립건수 255건으로 상법상회사의 '13년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

<협동조합 운영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처리건수(9월 말)	신청/처리건수(10월 말)	신청/처리건수*(11월 말)
일반협동조합	2,598/2,533	2,811/2,750	3,003/2,944
사회적협동조합	131/78	127/91	132/102
연 합 회	11/10	12/10	13/11
총 계	2,740/2,621	2,950/2,851	3,148/3,057

주: *11월 말 신청/처리건수는 잠정집계결과임.

○ 지난 11.15일 발표한 실태조사결과*, 협동조합당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약 1만 명 신규 고용 창출 예상

※ '13.5월 기준 기본법에 따라 신고·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747개를 대상으로 '13.7월 현재의 사업·재무·고용 현황 등 조사

- (지역별) 서울시 88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도(419건), 광주시(248건), 부산시(183건) 순, 100건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광역지자체 10곳

- (업종별) 도소매업(892건, 30.3%), 교육서비스업(344건, 11.7%), 농어업(288건, 9.8%), 제조업(277건, 9.4%)의 비중이 높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

- (설립 시 출자금) 일반협동조합 평균 1,893만 원, 사회적협동조합 평균 4,032만 원, 출자금 1,000만 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은 높지 않은 편

- (설립동의자의 경우) 협동조합당 평균 15.2명이 참여(일반협동조합 12.3명, 사회적협동조합 98.0명)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결과 조합당 조합원이 58.7명임을 고려할 때 설립 후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참여 및 출자금 규모*가 함께 증가

※ 실태조사결과 평균출자금: 일반협동조합 약 2,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 약 7,000만 원

□ 협동조합 효과적 운영 지원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개통(12.2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에 맞추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효과적 지원

-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포털과 협동조합 운영 현황 관리 및 통계DB 등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구성

○ [홍보포털 개선]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설립현황 실시간 통계, 각종 교육자료, 경영공시자료 등 국민 정보서비스 다양화

※ 경영정보 공개대상: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중 조합원 수 200인 이상 or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 [행정시스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협동조합 신고 수리·인가 업무처리 및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 현황 통합 관리, 홍보포털과 실시간으로 연계

※ 기존 지자체의 민원처리시스템(시도/서울행정시스템)에 협동조합 민원 처리 기능 추가 구축

○ [협동조합 우수사례집 제작] 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들 중에서 선정된 32개 우수사례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제공, 12월 중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

○ [기대효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협동조합의 판로확대에 기여,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 현황>

연번	소관 지자체	신고/수리 건수 누계 (9.30일 기준)	신고/수리 건수 누계 (10.31일 기준)	신고/수리 건수 누계 (11.30일 기준)
1	서울특별시	781/759	852/830	906/885
2	부산광역시	167/167	172/172	183/183
3	대구광역시	102/101	112/111	117/117
4	인천광역시	76/73	83/79	85/85
5	광주광역시	229/224	239/236	255/248
6	대전광역시	105/98	109/108	112/112
7	울산광역시	45/42	52/49	55/53
8	경 기 도	350/344	387/377	430/419
9	강 원 도	93/90	99/99	108/102
10	충청북도	78/78	82/82	84/84
11	충청남도	83/79	91/82	99/97
12	전라북도	169/164	173/173	180/175
13	전라남도	105/104	113/107	123/121
14	경상북도	98/94	108/107	112/112
15	경상남도	77/77	90/90	98/98
16	제주특별자치도	31/31	37/37	43/40
17	세종특별자치시	9/8	12/11	13/13
총 계		2,598/2,533	2,811/2,750	3,003/2,944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및 인가 현황>

연번	소관 부처	신청/인가 건수 누계 (9.30일 기준)	신청/인가 건수 누계 (10.31일 기준)	신청/인가 건수 누계 (11.30일 기준)
1	기획재정부	20/16	21/18	22/21
2	교 육 부	21/14	21/14	20/14
3	미래창조과학부	-	-	1/-
4	외 교 부	1/1	1/1	1/1
5	안전행정부	3/2	3/2	3/2
6	문화체육관광부	9/5	7/6	8/6
7	농림축산식품부	5/5	7/5	7/5
8	산업통상자원부	2/2	3/3	4/3
9	보건복지부	28/8	21/9	19/12
10	환 경 부	5/3	4/3	4/3
11	고용노동부	26/15	27/21	31/25
12	여성가족부	4/3	5/4	5/4
13	국토교통부	1/1	1/1	1/1
14	해양수산부	1/-	1/-	1/-
15	중소기업청	3/2	3/3	3/3
16	산 립 청	2/1	2/1	2/2
총 계		131/78	127/91	132/102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107.5(2010년=100), 전월대비 0.1%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9% ↑

<연도별 10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구 분	연도별 10월 동향					최근 월별 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 수	97.7	100.6	104.8	106.5	107.5	107.3	107.2	107.4	107.7	107.9	107.6	107.5
전 월 비	0.2	-0.5	0.1	-0.4	-0.1	0.0	-0.1	0.2	0.3	0.2	-0.3	-0.1
전년동월비	2.4	3.0	4.2	1.6	0.9	1.0	1.0	1.4	1.3	0.8	0.7	0.9
전년동기비	2.8	2.9	4.0	2.2	1.2	1.3	1.3	1.3	1.3	1.3	1.2	1.2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107.2,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8% ↑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106.2,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5% ↑

○ [생활물가지수] 106.2,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2% ↑

- (식품) 107.7, 전월대비 1.0% 하락(전년 동월대비 0.4% ↓)

- (식품이외) 105.6,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0.5% ↑)

○ [신선식품지수] 100.3, 전월대비 3.8% 하락

※ 전년 동월대비 8.5% ↓

- (신선어개) 108.8, 전월대비 1.3% 상승(전년 동월대비 동일)

- (신선채소) 84.8, 전월대비 5.6% 하락(전년 동월대비 14.8% ↓)

- (신선과실) 111.1, 전월대비 5.4% 하락(전년 동월대비 7.4% ↓)

- (기타신선식품) 89.5, 전월대비 2.0% 하락(전년 동월대비 16.4%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05.8, 전월대비 2.6% 하락

※ 전년 동월대비 3.7% ↓

- (농산물) 105.9, 전월대비 3.9% 하락(전년 동월대비 8.8% ↓)
- (축산물) 102.2, 전월대비 2.1% 하락(전년 동월대비 5.0% ↑)
- (수산물) 112.0, 전월대비 1.1% 상승(전년 동월대비 1.3% ↑)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구 분	품목수	가중치	2012.10월				2013.10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11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11월)
총 지 수	481	1000.0	106.5	-0.4	1.6	2.2	107.5	-0.1	0.9	1.2
농축수산물	71	77.6	109.9	-4.3	2.9	3.3	105.8	-2.6	-3.7	-0.9
농 산 물	51	43.5	116.1	-5.8	7.6	8.8	105.9	-3.9	-8.8	-1.0
축 산 물	6	22.1	97.3	-3.6	-5.6	-7.1	102.2	-2.1	5.0	-1.9
수 산 물	14	12.0	110.6	0.8	1.0	2.7	112.0	1.1	1.3	1.5

〈2013년 11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품목	부추(49.1), 생화(15.7), 굴(14.5), 갈치(3.5), 가지(24.9), 미나리(10.6), 감자(5.3)	돼지고기(5.6), 달걀(14.6), 바나나(28.5), 쌀(2.1), 혼식곡(20.1), 조개(12.4), 마른멸치(9.7)
하락 품목	배추(-34.5), 돼지고기(-5.3), 사과(-6.7), 감(-19.5), 배(-13.2), 굴(-9.8), 시금치(-20.6)	고춧가루(-27.1), 배추(-39.7), 파(-33.8), 배(-25.4), 포도(-18.8), 무(-33.1), 딸기(-20.9)

기획 정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동향

※ 본 자료는 타 기관 자료 및 언론동향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배경 및 의의

- TPP는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FTA(P4라고 약칭)가 모태이며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2013년 일본 합류*로 총 12개국 참여
 - ※ '11.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심표명' 밝힌 후 2년 가까이 비공식 협의를 거쳐 '13.7월 제18차 공식 협상부터 참여



- 2011.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도 관심 표명하면서 그 범위가 급속히 확대
 - ※ TPP 체결은 세계 1위와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여서 EU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FTA 협상 가운데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협상
- 그동안 19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협력체로서 TPP가 크게 부각되어 국제사회의 관심 급부상
 - 체결될 경우 전 세계 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 형성 전망
 - ※ TPP가 현 상태로 타결되면 인구 7억8천 만 명, 명목 GDP 26조6천 억 달러, 무역규모 10조2천 억 달러

- TPP는 협정국 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가 목표이며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FTA로서 **급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목표) ‘21세기형 FTA’로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역내 공급체계 강화,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 (협상 원칙) 개별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이슈 등 29개 챕터의 일괄타결

□ TPP 추진현황 및 주요쟁점

1) TPP 추진현황

- 2006.3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발표된 P4(Pacific 4)협정*의 확대·발전 차원에서 논의 진행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상 진행 과정〉

시 기	주요 내용
2006년	• P4(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협정 발효(3월)
2008년	•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9월)
2010년	• P4 협정 회원국+4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TPP 협상 개시(3월) / • 2차 협상 개최(6월) • 3차 협상 개최(10월) / •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10월) / • 4차 협상 개최(12월)
2011년	• 5차 협상 개최(2월) / • 6차 협상 개최(3월) / • 7차 협상 개최(6월) • 8차 협상 개최(9월) / • 9차 협상 개최(10월) / • 10차 협상 개최(12월)
2012년	• 11차 협상 개최(3월) / • 12차 협상 개최(5월) / • 13차 협상 개최(7월) • 14차 협상 개최(9월) / • 캐나다, 멕시코 참가(10월) / • 15차 협상 개최(12월)
2013년	• 16차 협상 개최(3월) / • 일본 협상 참가 승인(4월) • 17차 협상 개최(5.15~24일, 페루) / • 18차 협상 개최(7월), • 19차 협상 개최(8월)

자료: 국제경제리뷰 제 2013-13호, 한국은행(2013.6.5.).

- **2008년 미국의 참가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 증대, 이후 **2010.3월 P4 협정 회원국과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 시작**

※ TPP는 협상국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협상국들의 컨센서스 하에 새로운 국가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참여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실천 의지 제시해야함.

- 페루에서 개최된 17차 협상에서 포괄적인 관세 감축안 등을 포함, 일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으로써 최종 타결에 일보 진전
- 2013.7월 일본의 공식 참여는 **세계 GDP의 약 38%**를 접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높여 TPP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는 계기 마련해 **마일 FTA 성격을 띠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블록 형성**

- 한국 정부,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13.11.29일)에서 **TPP에 대해 관심 표명**하기로 하고 WTO 각료회의(’ 13.12.3-6일, 발리) 참석 시 관심표명 의사 전달,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 진행

※ TPP 협상참여 절차: 관심표명 →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 → 공식 협상참여

2) TPP 주요쟁점

- **협상의 주요 쟁점**은 **각국의 민감품목별 시장접근**이며, **미국은 베트남의 직물·의류, 호주의 설탕, 뉴질랜드의 낙농품** 시장개방에, **일본은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내세운 상황

〈TPP 협상 주요 쟁점별 참가국의 입장〉

찬 성	쟁 점	반 대
일본	• 승용차, 부품 관세 철폐	미국,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 외자투자 규제 철폐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일본	• 국유-민간기업 간 경쟁조건 정비	베트남
베트남	• 섬유제품 관세 철폐	미국
미국	• 검역·식품안전기준 완화	일본
미국	농산물 관세 철폐	• 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밀/보리, 쇠고기
호주, 뉴질랜드		• 유제품
호주		• 사탕

자료: CEO Information 제895호, 삼성경제연구소(2013.5.15.).

- **(관세)** 협상 참여국간 관세율 격차가 커서 적용 관세율 조정이 쉽지 않고 각국의 민감품목(특히 농산품)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쟁점 사항
- **(비관세)** 주로 신흥국과 선진국간의 상이한 경제사정 등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쟁점 제기
- **(지적재산권)** 적용규정의 강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에서 의견 대립
- **(투자)**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간의 동등 대우, 국가 투자자간 소송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
- **(노동)** ILO 핵심원칙* 준수, 아동 노동력 착취로 생산된 상품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둘러싼 이견
 - ※ 근로기준과 근로기본 권리 보장,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 노사정 참여보장 및 사회적 대화 강화

〈TPP 주요 협상 분야 및 내용〉

협상 분야	협상 내용
상품시장접근	•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방법 등
원산지 규정	• ‘제약국(원산지) 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및 인증 절차
무역 원활화	• 통관 절차 간소화
위생 검역	• 식품 안전성 확보, 위생검역 조치 이행에 관한 규범
기술 장벽	• 제품의 안전규격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 제정
무역 구제	•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요건
정부 조달	• 정부 구매, 공공사업의 발주 관련 규범
지적재산권	• 모조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태의 취급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으로 의약품의 자가 공급 차질 발생 우려 →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Special 301조의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로서 우려
경쟁 정책	• 경쟁 법 및 제도의 강화, 정부 간 협력 →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국영기업 보호 철폐 요구에 대한 우려
서비스 교역	•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제 철폐, 비차별원칙
인력 이동	•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및 체재 수속의 간소화
금융 서비스	•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관련 규범
통신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정 접근 등에 관한 의무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환경, 규범의 정리 등에 관한 원칙
투자	• 국내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 원칙,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
환경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노동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노동기준의 엄격한 준수 요구에 대한 우려
분쟁 해결	• 협정해석의 불일치 등에 의한 제약국 간 분쟁해결절차
협력	• 협정의 이행 체제가 미비한 국가에 대한 지원
cross-cutting issues	• 복수 분야에 걸친 규제에 대한 무역 장벽 방지
협정 이행	•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기관의 설치 및 권한

자료: USTR 홈페이지 / 국제경제리뷰 제 2013-13호, 한국은행(2013.6.5.).

□ 주요국 및 우리나라 입장

1) 주요국 입장

- **[미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실현**을 통한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 등의 목적으로 TPP 타결에 **적극적** 입장
※ 오바마 정부, 2013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내 TPP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
- **[일본]** **중장기 성장전략의 주요 수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및 자국의 영향력 유지** 등의 차원에서 TPP 활용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한국 FTA 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 등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다자간 FTA 적극 참여 하기 시작('13.7월부터 참여)

※ 일본이 FTA를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한 이유는 농업 부문 등 피해계층의 강한 반대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지만 TPP 참가한 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50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농정 개혁 추진

- **[중국/ASEAN]** 중국, TPP의 협상 대상이 비관세분야를 중심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 아시안, TPP 추진에 따른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주도적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각각 동 협정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
※ 중국 정부, TPP를 미국의 중국 포위·고립 전략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유연한 대응 기조**

2) 우리나라 입장

- TPP 가입조건과 다른 참여국 개방수준을 면밀히 살펴 득실검토한 후 확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
- 최근 **12개국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어차피 참여할 거라면 지금이 협상 참여와 가입 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 **12월부터 12개 TPP 참가국과 개별 협상 시작**
※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요청, '13.11.7일 한-미 FTA 고위급 협의에서도 TPP 참여 논의
- TPP 참여할게 될 경우, 한국은 **한-미-일 경제동반자적 관계**가 더 **강화** 되지만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한-중 FTA**를 **우선**시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 **섬유와 화학, 전자업계는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및 철강산업, **농축수산업계는 값싼 수입제품이 개방되어 피해** 우려

□ 논의동향 및 전망

- 2013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년 내 타결에 난항 예상**
※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커, 연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연내에 부문 타결, 2014.4-5월경 최종적인 협상 타결 대안도 제기
- 협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상호 민감 부문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협정의 개방수준 조정할 경우, **연내 극적 타결도 가능**

※ 미국 무역대표부, 11.24일, “12개국 TPP 협상대표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열새간 열린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성명 발표

- ‘**전 품목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최근 사안
 별로 **이해관계국 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

※ 최근 미일 사전협의를 통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협상의 돌파구
 마련...2013.4월 일본의 일부 농수산물 관세 철폐 예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 등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

- **일본의 TPP 참가 선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하려는 **미국**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충돌 가능성 높아진 상황

-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역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정책 변화에 신중히 대응

- **TPP의 부상**으로 **한국의 통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TPP참여에 대한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TPP 참여효과**는 **극대화**
 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책** 마련 시급

※ 참고문헌

-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_「“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을 표명”」(2013.11.29)
-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동향과 진단_「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2013.11.23)
- 경기개발연구원 GRI 현안분석_「동남아시아 경제권 부상과 대응방향」(2013.7.28)
- 국제무역연구원 IIT Trade Focus Vol.12 No.42_「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 TPP, 일·EU
 FTA 등 최근 일본의 FTA 추진동향을 중심으로 -」(2013.7)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895호_「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3대 FTA의 부상」(2013.5.15)
-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3-13호_「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
 장」(2013.6.5)
- 삼성경제연구소 SER 경제 포커스 제369호_「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망과 대응방향」(2011.11.29)
- 문화일보 보도자료_「잡여 땀 등 민감품목 설정 쟁점화...불발 땀 무역시장 소와...수출타격」(2013.12.2)
- 매일경제 보도자료_「TPP發 무역 빅뱅...일본車 대공세 비상」(2013.12.2)
- 문화일보 보도자료_「<TPP 협상 시작>車업계 “日에 국내시장 열어주는 꿀” 강력 반발」(2013.12.2)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_「한국경제, 수출비상 걸렸다」(2013.12.2)
- 조선일보 보도자료_「준비 없이 농축산 시장 열면 ‘쇠고기 사태’ 또 올 수도」(2013.12.2)
- 국민일보 보도자료_「美 주도 ‘메가 FTA’ 급물살 탄다」(2013.11.30)
- 매일경제 보도자료_「TPP란 美주도 환태평양 12개국 자유무역협정」(2013.11.30)
- 조선TV 뉴스 보도자료_「TPP 참여, 우리 경제 득실은?」(2013.11.30)
- 연합뉴스 보도자료_「TPP 협상=이란...세계 최대 ‘메가 FTA」(2013.11.29)
- 헤럴드 경제 보도자료_「G2 사이에 낀 난해한 TPP 방정식...글로벌 무역판짜기 섹션 분주」(2013.11.29)

〈각국의 TPP 협상 참가 목적 및 민감 사항〉

구 분	국 가	참가 목적(기대)	민감 사항
P4	싱가포르	•중계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라 는 이점이 극대화되는 효과 기대	•(경쟁) 정부 관계 기업
	칠 레	•TPP 체결을 통해 고성장 지역인 아시아 시장의 진출 확대	•(상품) 설탕의 관세 철폐 •(지재권) 미국이 자재권 관련 우선 감사국 으로 지정
	뉴질랜드	•무역, 투자면에서의 규제와 관세 장벽이 낮고 1차상품 수출에 의존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수출증가 기대	•(지재권)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경쟁) 약가 억제 위한 보조금정책 •(금융) 정부출자 우정사업 산하의 은행, 보험
	브루나이	•참가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기대	•(경쟁) 자원 분야의 국영기업 •(지재권) 미국이 자재권 관련 감사국 지정 •(노동) 노동 기준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 제기
추가 참가국	미 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도모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산업경쟁력의 강화	•(상품) 설탕(호주), 유제품(뉴질랜드), 자동차(일본), 섬유(베트남) 등의 시장 개방 요구
	호 주	•설탕 등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투자) ISD 수용 요구 •(지재권) 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한 국내 정책 변경
	페 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 FTA 체결 하는 효과와 함께 견제효과	•(지재권) 미국이 자재권 관련 감사국 지정
	베 트 남	•미국 수출확대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 탈피, 시장경제국가로서의 지위 획득	•(경쟁) 국영기업 다수 •(정부조달) 자국 기업 우대 의무 변경 •(지재권) 미국이 자재권 관련 감사국 지정 •(노동) 엄정한 노동기준 준수 요구 •(서비스) 소매 유통시장(일본) 개방
	말레이시아	•미국과 양자간 FTA 협상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TPP 협상 참가	•(상품) 자동차 시장 개방(높은 관세로 국영 2개사 보호) •(정부조달) 말레이시아 민족 우대 정책 개선 요구 •(지재권) 체네틱 등 통한 약가 안정 방해 •(노동) 엄정한 노동기준 준수 요구
	캐 나 다	•고성장 중인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자원 판매 확대 가능	•(상품) 낙농·양계업 보호 위한 정부의 공급 관리제도 개선 요구(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멕 시 코	•고성장 지역의 시장진출	•(상품) 제조업 강국 확대 시 산업계 반대 가능성
	일 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와 농업부문 개혁 도모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상품) 농수산물 시장 개방 •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 요구

자료: 국제경제리뷰 제 2013-13호, 한국은행(2013.6.5.) / IIT Trade Focus Vol.12 No.42, 국제
 무역연구원(2013.7.).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2일~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부, TPP 참여 ‘관심표명’ , 속도 낸다

- 정부, 11.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TPP 참여 ‘관심표명’ ***. ▲TPP참여 절차…조만간 기존 12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 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 협상 참여,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기존 회원국 전체의 승인 받아야 본협상 참여 가능. ▲정부입장…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 심층적 분석,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만 **관심표명이 TPP 참여 확정은 불분명**. ▲**TPP 참여에 속도 내는 이유…협상 타결 가시화**. TPP 회원국들은 11.19~24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쟁점을 좁힌 것을 토대로 **12.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회의**에서 **잠정타결 선언 가능성** 전망. ▲**TPP 회원국 대부분 농업강국, 농업계 우려**…2005년 TPP를 창설한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는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의 술담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하 식품 포함) 관세 철폐, 뉴질랜드는 99.2%의 농산물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나머지 0.8%의 관세도 최장 5년 내에 철폐. 칠레와 브루나이 역시 각각 12년과 7년 내에 농산물 시장 개방, 싱가포르는 현재 주류에만 관세를 부과할 뿐 다른 농산물 무관세.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거셀 듯**…미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2015년 이후 미국산 쌀 관세 인하 및 곡물류 중에서는 미국이 콩과 감자의 개방 확대 요구 가능성 높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축산물 쟁점화 예상

※ TPP 참여 가능성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 TPP 협상 참여 위한 대외절차 첫 번째 과정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12.2.)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축산신문·한국 농업신문(2013.12.4.)

□ 안·오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 산업통상자원부, 12.4일,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돼 **2015년부터 발효** 예상. (**호주**)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 5년 내 철폐, (**한국**) 수입액 기준 92.4%(품목수 기준 90.8%)에 부과되는 관세 8년 내 철폐하는데 합의. 한·미, 한·EU FTA와 비교하면 농축산 분야

개방 정도가 낮은 편.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2030년쯤 완전 철폐**…국내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는 현 40% 수준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2~3% 포인트씩 단계적 인하, **국내 축산농가 피해** 우려. ▲**쇠고기 포함해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세 인하**. ▲**쌀, 분유, 과일(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 개방 제외. ▲**호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발효 즉시 철폐**…현재 관세가 5%인 자동차는 호주의 수입액 기준 76.6%에 해당하는 가솔린 중소형차 등 20개 품목 해당, **자동차 수출확대 기대**.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전기기기 즉시 철폐. ▲호주가 그동안 반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한·미 FTA 수준으로 관철**.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외가공지역 조항 도입**. 한편 캐나다와의 FTA 협상 실질적 진전 이뤄 조만간 타결, 뉴질랜드와는 내년 2월 FTA 공식협상 재개 예정

※ 한국과 호주는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5차례 FTA 공식협상 진행하다가 ISD(투자자국가소송),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였지만 이후 3년 6개월 만인 11월 공식협상 재개 합의

※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 (한국) 공산품, (호주) 원자재·에너지자원 수출하는 교역구조. 322억 달러 규모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 이 가운데 1/5이 농축산분야

자료 : 국민일보·경향신문·조선신문·중앙일보·이투데이·연합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MBCSBS(2013.12.6.)

□ 정부, 쌀 목표가격 17만83원 → 17만9,686원 인상

- 1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서 정치권과 인상폭이 미흡하다는 농민 반발 감안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 인상한 80kg당 17만9,686원** 제시. 인상폭 미흡하지만 부족분은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농사 지원 등으로 보완. 지난해로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해 국회에 목표가격 변동동의안 제출**

※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도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일정 가격 인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현금 보전하는 것,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kg당 17만83원으로 고정

※ 이에 농민단체는 23만 원, 민주당은 19만5,900원 인상폭 요구

자료 : 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한국경제·KBS·YTN(2013.12.5.) / 동아일보·이투데이(2013.12.6.)

□ 안·중·일 FTA 3차 협상 마무리

- 산업통상자원부, 11.26~29일, 한·중·일 3국, 도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개최, **농산물이 포함된 상품분야 모델리티(관세감축 틀), 협상 범위 논의**.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개방 계획서)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 방안, 통계교환, 다른 FTA와의 관계 집중 논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작업반 회의도 개최. 특히 3국 모두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는 점 감안해 **FTA와 RCEP 협상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키로. 4차 협상은 내년 2월쯤 한국 개최 예정
※ RCEP 협상에는 3국 외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호주·뉴질랜드·인도 참여
자료 : 농민신문(2013.12.2.)

□ 중국 정부, 인삼산업 전폭 지원...고려인삼 위협

- 중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하고 있어 **고려 인삼 위협**. 따라서 **고려인삼에 대한 홍보 강화와 중국 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등 대응책 마련** 시급. 농협경제연구소, 중국은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세계 인삼의 55.9%, 생산량 4만4,749톤)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잔류량 문제 등 국제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 **▲정부차원 제도 개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위생부, 최근 식품안전법·신자원식품관리방법 의거,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는 법규 개정, 중국 인삼의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과 표준재배 매뉴얼 확립 등 품질관리에 집중해 고급품 시장으로의 진입 시도, 특히 지린성은 중국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연구,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 최근 **관라기술 개발 주력**하며 **고급품 시장 진입 노력**
※ 뿌리삼 수출 시장에서 캐나다(30.2%), 한국(22.9%), 미국(16.8%)에 이어 15.9% 점유율
※※ 표준화된 인삼생산기지 건설, 생산량의 80% 이상을 무공해로 재배해 청정인삼 실현, 생산량의 50% 이상을 GAP로 품질 관리, 생산액 1억 위안 기업 10개 육성, 장백산인삼의 브랜드화 등
자료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12.5.)

□ 로컬푸드 직매장 난립으로 과잉 우려

- 로컬푸드 직매장*, **시군별로 3~4개 난립**돼 과잉 우려.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하고 있어 **상권 중복**되거나 **농가들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등 부작용 예상. 지자체,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한 직매장 설립**은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매장이 아닌 **선거용으로 전략** 가능성 지적
※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로컬푸드형 직매장을 201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시킬 계획, 금년 중 정부 지원 및 자체 사업을 통해 40개 내외의 직매장 운영 예상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12.4.)

□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단가 15년째 '제자리'

-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단가가 15년째 제자리걸음. ▲대한한돈협회...최근 2014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시행지침 개정 관련,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의 지원 단가** 7만4,000원/㎡ → **15만5,000원/㎡**으로 **상향조정 현실화 요구**. ▲농식품부...**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 맞춰 추진. 하지만 현행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의 지원한도는 원자재 및 각종 비용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농가...농가 개별처리시설을 개보수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운 실정**. 약 3,000두 사육하는 농가(15~20톤/일)의 방류시설 설치 시 실제비용은 약 4~5억 원 필요하지만 지원사업비는 약 2억2,200만 원(3,000㎡*7만4,00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
※ 한돈협회는 이번에 제안한 지원단가에 대해 농식품부·환경부 공동의 정화방류 표준설계도와 유사한 실제 시공업체 8개사의 처리규모별 견적 비교, 분석해 산출
자료 : 농축유통신문·축산신문(2013.12.2.)

□ 무어가 축사 적법화 지원...거리제한 기준도 연일와

- 농식품부, 각계·현장 의견 수렴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마련. ▲목적...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환경 보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 ▲5개 세부추진과제 추진내용...**(생산기반 조성)**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 마련, 무허가 축사에 대한 원활한 적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면서 거리제한 기준 현실화, **(유통소비기반 확립)**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 구축, 친환경축산 자조금 조성, 거점도축장 지원 확대,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 공개, 재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인증제 단순화·체계화, 도축장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별도인증 의무화, **(환경부담 최소화)** 지역별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종합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수립 의무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활용으로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농경지 살포·정화방류까지 단계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자료 : 축산신문(2013.12.4.)

□ 1인 가구 증가 즉석조리식품 시장 급성장...식품산업 블루오션

- 농식품부, 식품산업 통계·정보 사업의 일환으로 즉석조리식품, 조미료, 양념장 및 식염 시장 현황을 담은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즉석조리식품...**생산액 2008년 1,932억 원 → 2011년 3642억 원, **3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는 등 **급성장**. 가정용 외에 외식업체와 단체 급식소 등 B2B* 시장에서도 수요 지속 확대 **▲조미료...**12년 기준 **가정용과 업소용 포함해 약 6,268억 원**, 이 중 소매시장 규모는 1,755억 원으로 조미료 시장의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특히 **향후 지속 구입 의향 조사**에서 **자연조미료만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76.9%**로 나타나 향후 조미료 시장에서 자연조미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 확대 예상. **▲양념장...**소스류의 일종, **판매시장 규모는 12년 기준 944억 원** 추정, 소매유통 규모는 711억 원(전체 시장의 75%), 이 중 고기 양념장이 63.7%, 찌개 양념장이 31.1%. **▲식염...**생산량은 2004년 이후 22~24만 톤 전후 기록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생산액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1년 기준 967억 원. 이는 2008년 이후부터 식염생산실적 통계에 천일염, 태운용염**소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

※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이며 이를 전자상거래법하에 은행이 매매보호 및 지급보증

※ ※ 태운·용융소금: 암염·천일염 등 원료소금을 고온에서 그 원래의 형태를 변화시킨 소금(염화나트륨 함량 88% 이상)

※ ※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약처): ('04) 224천 톤/487억 원 → ('09) 242/827 → ('11) 247/967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12.2.) / 농민신문(2013.12.4.)

□ 발농사·육아가사·노동까지 일틈 없는 여성 농민

[여성농민 농부증 발병률, 남성보다 높아]

- 농업노동은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 요구하며, 규정된 근무시간도 없어 **여성농민들은 남성농민보다 높은 질병 발생 빈도**
 - 여성농민들은 남성과 함께 농사짓는 기존 주작목 외 발작물,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농사일에 소비하며 가사일까지 전담
 - ※ 2008년 충남지역에서 1년 동안 남녀 농민의 농부증 비율 조사 결과, 여성농민의 비율이 남성 농민보다 17.6%나 높음.

[기회·정보부족으로 개인소득 없어]

- 많은 여성농민들이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 외 소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회나 정보능력 부족으로 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규모 농가, 여성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 ※ 식품위생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민이 농산물을 단순 변형해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농협 여성조합원 참여 저조]

- 지역농협들이 출자금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 **출자금이 부담스러운 여성 농민들은 조합원 가입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
 -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보고서, 2010년 기준 여성조합원 비율 28%에 불과. 지역농협 여성대의원은 1만1,247명으로 전체 대의원의 15% 수준. 여성임원은 419명으로 전체임원의 4% 추정, 여성농민 비율이 크게 저조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인정받아야]

- 농촌사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 매우 저조**
- 실제 농가의 자산이라고 하는 농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은 80%이상 남편 명의, 토지 매매와 영농자금 대출 등 의사결정에 여성이 관여하지 않는 비율 40%**에 육박, **경영주 18%**에 불과
- 독립 경영주를 제외하고 여성농민은 사회적으로 무소득 지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가치 미반영

[보육의 어려움]

- 농어촌지역은 **도시 대비 보육시설 공급 부족, 접근성마저 열악. 근로 여건이 불규칙**해 근로시간 이후에도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여성 농민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절실**
 - ※ 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1만3,018개, 중소도시 1만 3,97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6,504개소뿐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3.12.2.)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사회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복지

- **[생활여건]** 과거에 비해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늘고, 나빠졌다는 평가는 줄어
 - (좋아졌다) 「전반적인 생활여건(30.9 → 31.0%)」, 「보건의료서비스(39.5 → 39.3%)」, 「사회보장제도(31.6 → 32.6%)」
 - (나빠졌다) 「전반적인 생활여건(29.0 → 24.1%)」, 「보건의료서비스(10.7 → 7.3%)」, 「사회보장제도(17.1 → 13.0%)」,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17.9 → 13.9%)」
- ※ 2011년 조사와 비교
- **[공공시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시설(24.1%)” 확충을 많이 요구
- **[복지서비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39.4%)” 확대가 가장 필요
- **[장애인 차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비율 66.5%
 -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41.0%)”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
- **[고령자의 어려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어려움은 “경제문제”와 “건강”
 - (**생활비 마련**) 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63.6%)”
 -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자는 67.8%, 주된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 (**자녀와 동거 의향**) 60세 이상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 (**고령자 복지**) 고령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30.9%)”이 가장 많아
- **[노후 준비]** 노후 준비 가구주는 72.9%,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52.5%)
- **[장례방법]** “화장 후 자연장(45.3%)” 가장 선호

□ 사회참여

- **[사회적 관계망]**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경우가 74.7%
- **[단체 참여]** “친목 및 사교단체(75.3%)”에 가장 많이 참여
- **[기부 경험]**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4.6%, 주로 현금 기부
-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자원봉사 참여율 19.9%, 참여자의 연간 평균 참여시간 25.1시간

□ 문화와 여가

- **[신문 인구]** 신문 보는 비율 72.6%, 일반신문(56.4%)보다 인터넷신문(81.5%)이 많아
- **[독서 인구]** 독서 인구 비율 62.4%, 독서량 1인당 17.9권
- **[레저시설]** 레저시설 이용 인구 71.4%, 주로 “관광명소(71.4%)” 이용
- **[문화예술·스포츠관람]** 관람비율 63.4%, 관람횟수 평균 8.9회, “영화관람”이 최다
- **[여가활용]** 주말·휴일의 여가는 주로 “TV 및 DVD 시청(59.9%)”
- **[여가활동 대상]** 여가활동 대상은 주로 “가족”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소득과 소비

- **[소득 만족도]** 본인 소득에 “불만족”인 사람은 49.0%
- **[가구소득·부채]** 전년보다 가구소득 감소는 26.1%, 가구부채 증가는 24.1%
- **[재정상태]** 가구주의 23.6%가 내년에는 가구재정이 더 “좋아질 것”
- **[소비생활 만족도]** 현재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13.6%
- **[건축소비지출항목]**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외식비” 먼저 줄여

□ 노동

- **[직업 선택 요인]** 직업 선택은 “수입 > 안정성 > 적성·흥미” 순
- **[선호직장]** 청년(13~29세)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8.6%)”
- **[여성취업]** 직업을 가질 경우, 가정 일에 관계없이 여성취업에 52.1% 찬성
- **[고용안정성]** 직업(장)에 대해 59.8%가 불안감을 느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불안감 느낌
- **[일·가정우선도]**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 한다(54.9%)” 가 더 많아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출산(전후) 휴가제(78.8%)” 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족 돌봄 휴직제(28.7%)” 가 가장 낮아

【조사주기】

- 총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
※ 2014년 조사 예정 부문: 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조사대상 및 기간】

- 자료는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부문에 대하여 전국 17,664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대상, 2013. 5. 11. ~ 5. 26.(16일) 동안 조사된 내용 집계
-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시점), 조사대상 연령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조사대상 연령】

- 조사대상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13세 이상 인구
※ 소득과 소비부문, 생활여건의 변화, 노후 준비방법 등은 만 19세 이상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만 29세 이하
※ 노인복지부문은 만 60세 이상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